

2025학년도 1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민 사 법 [OX형] 답안

시험일시 : 2025. 03. 15(토) 15:40 ~ 17:40

출제교수 : 김덕중 교수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X	24년 제2차 변모. 문 18.	
2	X	제9회 변시. 문 21.	
3	○	제9회 변시. 문 21.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함.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u>물권적청구권은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고</u> ,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함
4	X	제13회 변시. 문 19.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국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부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음.
5	○	24년 제2차 변모. 문 5.	
6	○	23년 제3차 변모. 문 20.	
7	○	22년 제2차 변모. 문 20.	B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행해지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u>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u>
8	○	24년 제2차 변모. 문 6.	
9	○	24년 제3차 변모. 문 35.	
10	X	제9회 변시. 문 33.	
11	○	제11회 변시. 문 23.	
12	○	22년 제1차 변모. 문 22.	
13	X	제12회 변시. 문 18.	
14	○	제12회 변시. 문 18.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u>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음</u>
15	X	제12회 변시. 문 3.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6	○	24년 제2차 변모. 문 6.	
17	○	제11회 변시. 문 27.	
18	○	24년 제3차 변모. 문 20.	
19	○	23년 제3차 변모. 문 6.	
20	○	제11회 변시. 문 29.	
21	X	22년 제3차 변모. 문 30.	
22	X	제9회 변시. 문 32.	
23	X	24년 제3차 변모. 문 6.	
24	X	제12회 변시. 문 14.	
25	○	제11회 변시. 문 63.	
26	○	제11회 변시. 문 8.	
27	○	24년 제3차 변모. 문 22.	
28	X	24년 제3차 변모. 문 2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u>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u>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 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9	X	제10회 변시. 문 22.	
30	X	제10회 변시. 문 24.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1	X	제10회 변시. 문 22.	
32	○	24년 제2차 변모. 문 19.	
33	X	제12회 변시. 문 3.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주장한 사안에서, <u>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이라고 봄이 타당함.</u> 사안의 경우 약정 계약금인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음
34	X	제9회 변시. 문 31.	
35	X	23년 제1차 변모. 문 26.	매도인이 약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u>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음</u>
36	○	23년 제1차 변모. 문 26.	
37	X	23년 제3차 변모. 문 28.	위 35번 사안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u>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u>
38	○	23년 제3차 변모. 문 28.	
39	X	제9회 변시. 문 59.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u>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u>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40	X	22년 제2차 변모. 문 29.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 <u>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u> ’ 을 요건으로 하는데,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유익비상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음
41	○	제11회 변시. 문 1.	
42	X	제10회 변시. 문 32.	
43	X	제10회 변시. 문 19.	
44	○	제9회 변시. 문 28.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u>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부정함.</u> 또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u>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乙)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임.</u> 결국 병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45	X	제10회 변시. 문 29.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46	○	제11회 변시. 문 8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u>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중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u>
47	X	제11회 변시. 문 19.	
48	○	22년 제2차 변모. 문 31.	
49	X	22년 제2차 변모. 문 31.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u>외측설의 태도(판례)에 의하면 을의 단독부담부분인 4,000만 원만큼 먼저 소멸하고, 다음으로 공동부담부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소멸하므로, 병의 부담부분은 5,000만 원임</u>
50	X	24년 제2차 변모. 문 21.	
51	X	제11회 변시. 문 11.	
52	X	제11회 변시. 문 15.	
53	X	23년 제1차 변모. 문 29.	
54	X	22년 제3차 변모. 문 3.	
55	X	23년 제1차 변모. 문 11.	<u>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u>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함. <u>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u>
56	X	23년 제3차 변모. 문 8.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u>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 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결국 甲은 명의신탁자 丙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u>
57	X	제10회 변시. 문 5.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함. 사안에서 1998. 5. 18.부터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 중인 2016. 5. 18. 0 명의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자 丙은 D에 대하여 2차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58	X	제9회 변시. 문 9.	
59	X	제9회 변시 문 13.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u>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담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u>
60	X	제9회 변시 문 13.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61	○	제10회 변시. 문 14.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62	X	23년 제1차 변모. 문 8.	
63	X	제9회 변시. 문 1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에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64	X	제9회 변시. 문 17.	
65	X	제9회 변시. 문 1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u>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u> 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임
66	○	제10회 변시. 문 6.	
67	○	제13회 변시. 문 26.	
68	○	제11회 변시. 문 18.	을은 정당한 양도담보권자임. 양도담보설정자인 갑과 사이에 1,000만 원의 추가 담보약정도 유효함. 대외적인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을이고 갑은 무권리자임(신탁적소유권이전설). 갑의 병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은 <u>무권리자의 처분행위</u> 로서 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함. 다만, 병의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되는데, 병의 점유취득 형태가 점유개정이므로 <u>선의취득의 요건</u> 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음
69	X	24년 제1차 변모. 문 14.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됨.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70	X	제12회 변시. 문 5.	
71	X	제13회 변시. 문 33.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몰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몰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음. 결국 채무자 乙은 상계로써 후순위저당권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음.
72	X	22년 제1차 변모. 문 19	
73	○	제11회 변시. 문 10.	
74	X	제10회 변시. 문 21.	
75	○	제13회 변시. 문 28.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76	○	제13회 변시. 문 28.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u>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u>
77	○	제9회 변시. 문 12.	
78	X	24년 제1차 변모. 문 15.	
79	X	24년 제1차 변모. 문 14.	
80	X	23년 제2차 변모. 문 17.	